

# 소련·동구관계의 역동성\*

— 1970년대를 중심으로 —

김익희

## I. 머리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소련의 대내외 정책상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동구의 “1989년 혁명”을 야기하고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제국(諸國) 간의 특수한 국제적 관계를 붕괴시킨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80년대 말에 극적으로 전개된 그 대파노라마의 연출자는 물론 소련만이 아니었다. 소련의 변화는 필요조건이었을 뿐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댐의 붕괴에 비유하자면, 댐 자체의 균열에 덧붙여 그것을 밀어 무너뜨릴 만큼의 압력을 가할만한 저수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대(對)동구 정책의 전략적 정책수정을 댐의 균열이었다고 한다면, “소비에트 블록”이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힘, 즉 수압은 궁극적으로 소련과 동구 각국 내부 및 이들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그동안 누적되고 증대되어 온 불만과 현상(現狀)타파 요구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자체도 역시 이 압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며 그것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 브레즈네프 시대의 소련과 동구 제국<sup>1)</sup>에 누적·증대된 이러한 “수압”의 실체를 역동성(dynamics)의 맥락에서 조망해 봄으로써 그들 “사회주의적” 국제관계의 성격과 특성, 문제점을 규명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그와 관련하여, 페레스트로이카가 출현하고 소련·동구 관계 자체가 붕괴된 맥락적 근원인(近遠因)에 대한 이해 또한 부분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소련과 동구 국제관계는<sup>2)</sup> 소련이 압도적인 지위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상호경제원조회의(CMEA)의 동시 회원국이었던 불가리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를 일컫음.

2) 여기서 “국제관계” 개념은 정치적, 법적 주체로서 국제무대의 전통적 행위자(actors)인 국가들의 상호관계로 이해된다. 과거 소련 또는 동구국가들에서, 양진영론에 입각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각각의 “세계체계”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나 계급의 위치와

차지하는 현격한 힘의 비대칭적 구조를 특징으로 했으며, 그 구조는 당시 국제정치상의 양극적 냉전질서에 의해 더욱 공고화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련이 동구 제국을 일방적으로 통제 또는 “착취”하고 자국의 대내외 정책에 종속시킴으로써, 대외적으로 “소비에트 블록”의 높은 내부결속도를 과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과 밀고 당기는 식의 바기닝(bargaining), 역동성에 대한 주목은 다소 역설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소련의 일방적 통제, 그리고 이에 의한 동구의 강요된 단결과 결속이라는 이미지는 많은 부분에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소련·동구관계의 다양한 전개과정과 이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부분적인 기여 밖에 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페레스트로이카, 특히 80년대말 소련과 동구 각국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의 원인과 정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장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사실 소련·동구관계사는 내외부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조건과 필요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조 자체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말미암아 현상타파의 “수압”이 점차 심화·누적된 상호갈등과 경쟁의 역사라는 측면이 더욱 강하였다. 예컨대 1956년 헝가리 사태나 1968년 “프라하의 봄”, 그리고 1980-81년 폴란드 사태와 같은 극적인 사건들이나, 이외 크고 작은 동구의 대중운동은 그러한 내부압력이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이 시기에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큰 사건이나 위기들이 소련·동구지역에서 상대

---

역할이 과소평가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적어도 80년대 말 이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적어도 흐루시초프 시대 이래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점점더 큰 비중이 두어져 왔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William Zimmerman, *Soviet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1956-196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Allen Lynch, *The Soviet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Margot Light,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p. 165를 볼 것.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도, 그들의 상호관계는 국가, 민족, 정부, 당, 여타 사회조직과 집단들 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괄하는 광범한 개념으로 공식 정의되었지만, 통상, 특히 스탈린에 의한 견고한 일석지주적 관계가 누스해지면서, 일차적으로 국가들 간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국제관계에 해당하는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international relations)는 무엇 보다도 국가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interstate relations)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С. Ангелов(отв. ред.),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нового типа (Москва: Политиздат, 1979), с. 22.

적으로 적어 평온했던 것같은 인상을 주었고, 또 소련이 초강대국으로서 대외적 팽창을 본격화함으로써 동구에 대한 소련의 지배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 소련·동구관계는 질보기와는 달리 사실상 그 어느 시기에 못지 않게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문제는 역동성의 존재유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발현된 과정이 전반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체제의 정체, 이와 관련한 개념들의 타성적 “왜곡”,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주의적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것은 각국에 누적된 정치적, 사회·경제적 모순들에 의해 국내문제가 악화하고 국가(또는 정권) 간의 이해상충과 불화가 증대하는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 II. 역동성의 제 측면

### 1. 정치·군사적 관계

#### 가. 대외적 단결: 유엔총회의 투표행태

유엔총회의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은 예컨대 소련이나 미국 등 강대국에 대한 동구와 라틴 아메리카 제국 등 약소국군(群)의 정치적 순응도를 각각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서 종종 시도되었다.<sup>3)</sup>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그 분석의 틀이나 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개괄적이거나 단편에 치우쳐, 유엔을 중심으로 한 소련과 동구의 대외적 행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는 1970-81년의 제25-36차 유엔총회에서 투표방식에 의해 채택된 결의 1,055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소련과 동구제국 간의 대외적 결속의 정도와 특성을 측정·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투표결과를 일반적 투표찬성도와 투표일탈도로 대별하고, 이를 (1) 투표의 성격(소련과 미국이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낸 “냉전투표”와 그렇지 않은 “비(非)냉전투표”) (2) 일탈강도(동구 각국이 소련의 입장에 정반대되는 투표를 한 “적극적 일탈”과 투표의 기권, 불참 등 “소극적 일탈”) (3) 투표이슈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그리고 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미국과 비(非)미국 NATO 국가들의 투표행태 - 단, 이 경우 1970, 75,

3) 예컨대, James Lee Ray, “Dependence, Political Compli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in Charles W. Kegley, Jr. and Pat McGowan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Policy Behavior* (Beverly Hills: Sage, 1981), Chap.5.

80년도만을 표본으로 삼았음 - 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분석결과를 일괄하면, 투표찬성도에서 소련과 동구국가들은 모두 70% 내외(루마니아: 84.8%)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내었고, 이 비율은 대체로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더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34.5%와 미국을 제외한 NATO 국가들의 1국 평균 58.3%와 대조적이다 (<표1> 참조).

<표 1> 투표 찬성도 비교, 1970-81

투표 건수 / %

전체	소련	불가리아	체코	동독 <sup>1</sup>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WTO <sup>2</sup>	미국	NATO <sup>3</sup>
1,055 100.0	734 69.6	730 69.2	729 69.1	592 69.5	728 69.0	746 70.7	885 84.8	71.6	321 34.5	583 58.3

1. 1973-81년 852건 기준
2. 소련을 제외한 동구6국의 1국 평균 찬성도
3. 1970, 75, 80년 종합. 미국을 제외한 1국 평균도 (서독: 1975, 80년 기준)

자료: UN, Dep't of Public Information, *Resolutions and Decis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NY: UN, 1970-1982 해당연도)

투표일탈도를 보면, 루마니아를 제외한 동구 5국의 경우, 투표의 성격, 일탈강도, 이슈의 구분에 거의 관계없이 소련의 입장으로부터 1% 내외의 극히 낮은 일탈도를 나타내었다(<표2, 3> 참조). 반면, 루마니아의 경우, 전체 일탈도는 24.7%로써 타동구국가들에 비해 현격한 일탈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투표성격별로는 비냉전 투표시 보다 냉전투표시 일탈율이 더 낮고(각각 33.0%, 21.3%), 일탈강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일탈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냉전투표시 그 일탈강도가 떨어지고, 투표이슈별로는 유엔 기구의 행정과 예산에 관련된 제5위원회 및 경제관련 제2위원회에서 일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때(각각 61.2%, 30.3%), 소련으로부터 루마니아의 일탈은 특히 비(非)정치적 성격을 띤 문제와 관련해 두드러졌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NATO의 경우를 보면, 미국으로부터 비(非)미국 NATO 국가들의 전체 평균 일탈도는 40.0%로서, 투표성격별로 별 차이가 없으며, 일탈강도상 적극적 일탈도가 높고 이 경향은 비냉전투표시에 현저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투표이슈별로는 제2위원회(64.1%) 뿐만 아니라, 본회의, 제4위원회(신락·식민지 문제 관련), 특별정치위원회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 비미국 NATO 국가들의 일탈이 정치적, 비정치적 이슈에 대체로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각국별 투표 일탈도 비교, 1970-81 (%)

구 분		불가리아	체코	동독 <sup>1</sup>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WTO <sup>2</sup>	NATO <sup>3</sup>
전체	적극	0.0	0.2	0.0	0.0	1.9	17.3	0.5	23.2
	소극	0.4	0.6	0.2	0.4	1.2	7.4	0.6	13.8
	계	0.4	0.8	0.2	0.4	3.1	24.7	1.1	40.0
냉전 투표	적극	0.0	0.3	0.0	0.0	2.5	14.2	0.5	24.5
	소극	0.4	0.5	0.3	0.4	1.4	7.1	0.4	17.3
	계	0.4	0.8	0.3	0.4	3.9	21.3	0.9	41.8
비 냉전 투표	적극	0.0	0.0	0.0	0.0	1.1	25.2	0.2	33.2
	소극	0.7	1.1	0.0	0.7	1.1	7.8	0.8	6.1
	계	0.7	1.1	0.0	0.7	2.2	33.0	1.0	39.3

1. 1973-81년 기준
  2. 소련과 루마니아를 제외한 동구5국
  3. 1970, 75, 80년 종합. 미국 제외. 서독: 1975, 80년 기준
- 자료: <표1>과 동일

계산방식: 1국 평균 투표일탈도(%) =  $\frac{\text{일탈투표수}}{\text{국가수} \times \text{투표건수}} \times 100$

<표 3> 이슈별(위원회별) 각국 투표 일탈도 비교, 1970-81 (%)

구 분	불가리아	체코	동독 <sup>1</sup>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NATO <sup>2</sup>
본회의	0.0	0.5	0.0	0.0	0.5	3.7	57.5
1 위	0.0	0.5	0.0	0.0	0.9	36.8	29.4
특 위	0.0	0.0	0.0	0.0	0.9	6.1	48.8
2 위	0.0	0.0	0.0	0.0	0.0	30.3	64.1
3 위	0.8	1.6	0.0	0.8	0.8	12.2	21.3
4 위	1.6	2.4	2.4	2.4	5.6	8.9	54.6
5 위	0.5	0.0	0.0	0.0	12.0	61.2	22.6
6 위	0.0	0.0	0.0	0.0	0.0	27.6	50.0

1. 1973-81년 852건
  2. 1970, 75, 80년 종합. 미국을 제외한 1국 평균도. 서독: 1975, 80년 기준
- 자료 및 계산방식: <표1>과 동일

미국과 비미국 NATO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위의 결과는 우선 소련과 동구 제국이 “신국제경제질서” 선언 이후,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유엔에서 영향력이 강화된 제3세계 국가들의 대세적 입장에 매우 높은 비율로 동조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한편, 동구 제국이 소련의 입장에서부터 일탈한 정도는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루마니아 역시, 비록 타동구 국가들보다는 꽤 높은 편이긴 하지만, 비미국 NATO 국가들의 경우에 비해 그 수준은 절반 가까운 정도로 낮고, 일탈한 이슈 또한 비정치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엔총회의 투표행태를 볼 때, 소련과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구 제국의 대외정치적 결속과 단결은 특기할만 한 정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나. 정치적 측면

시기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과 정부, 사회단체, 각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된 소련과 동구 각국의 비대칭적 양자간 관계는 소련이 동구 정권의 엘리트 인사문제를 비롯한 대내외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 통로 역할을 했다. 동구정권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소련의 이같은 통제력은 대외적으로 소련과 동구가 상당히 단합된 모습을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유엔총회 투표행태나, 유럽의 안보문제를 포함한 세계평화의 문제에 대한 빈번한 공동입장의 천명<sup>4)</sup> 등은 그 좋은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과 동구의 대외적 단결 이미지에는 또한 공식 이데올로기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할 수 있다. 유고의 이탈과 같이 공산권의 심각한 분열을 낳기도 했던 스탈린의 이념적 독단주의는, 스탈린 사후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으나 그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1968년의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소련·동구관계의 이념적 경직성을 집약하고 천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정치적, 이념적 통제와 단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sup>5)</sup> 소련·동

4) 예컨대, 소련 외무성에서 발간한 다음 두권의 자료집에 수록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110여 건의 공식문서들은 대부분이 소련과 동구의 일치단결된 대외적 입장천명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Организация Ва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 1955-1975 / 1955-1985: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Москва: Политиздат, 1975 / 1986).

5) 이러한 이미지의 구축에는 또한 서방, 특히 미국의 대동구 정책도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소련의 일반적 또는 특정한 입장에 대한 동구국가들의 대외행태상의 친소(親蘇)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소련으로부터 이탈적 경향을 보이는 국가 - 루마니아에 대해서 처립 - 를 포상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구차별화 정책이 그것이다. Charles Gati, *Hungary and the Soviet Bloc*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6), pp. 217-220. 서방학자들의 연구경향에도

구관계는 흐루시초프 이후 과거 스탈린주의적 일석지주체제를 불식하려는 노력을 또한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예컨대 “다양한 사회주의 건설방식” 노선이 발표되고 대(對)유고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동구내 소련 비밀경찰 조직이 해체되고 소련공산당 국제부로부터 집권 공산당만을 전담하는 부서(‘사회주의 국가 공산당·노동당 연락부’)가 신설(1957)되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과거의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1957, 60, 69)식의 소련이 주도하는 대외과시용 “단합대회”가 억제 또는 불가능하게 된 대신, 형식적 제도화에 의한 정치적 타협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상당수 이루어졌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고위급 협의채널(‘국방상 위원회’)와 ‘군사회의’ 등의 신설(1969), 그와 아울러 ‘정치자문위원회’(PCC)의 참여확대, ‘외상위원회’의 신설(1976) 등 군사와 정치 양부문에 걸쳐 다자간 협의채널 강화를 위한 조직구조로 개편되어 나아간 것은 그 좋은 예에 속한다.

아울러 동구 각국은 자국의 조건과 이해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대외정치적 행태를 나타내었다. 루마니아의 대외적 “자주노선”과 같은 노골적인 이탈은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동구국가들이 “소비에트 블록” 내부 및 외부의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해 나타낸 반응은 결코 일률적이지만은 않았다. 예컨대 중동문제, 체코침공, 미·중화해, 중·소위기 등 중요한 국제적 사건이나 위기사 동구국가들이 보인 태도는 상이했다.<sup>6)</sup> 특히 소련의 권력이앙을 전후한 시기에 소련 지도부의 분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일어난 동구 각국의 대중운동과 정권의 다양한 행태는 소련과 동구 간 정치적 관계의 역동성을 압축해서 보여준 것이었다.<sup>7)</sup>

#### 다. 군사적 측면

군사 구조적 측면에서 소련의 압도적 지위는 어느 다른 측면보다도 현저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경제적 부담의 80% 이상, 병력의 3/4 이상을 담당하였으며, 통합군과 동구 군대의 인사권과 지휘권, 무기체계, 군사 독트린, 교육과 훈련 등에서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만한 위치에 서 있었다.<sup>8)</sup>

---

반영된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상대적으로 동구국가들의 내부분쟁(인권, 민주화 문제 등)나 소련·동구관계의 역동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다.

6) Ivan Volgyes, *The Political Reliability of the Warsaw Pact Armies: The Southern Ti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2); Jeffrey Simon, *Cohesion and Dissension in Eastern Europe: Six Crises* (New York: Praeger, 1983); Daniel Nelson (ed.), *Soviet Allies: The Warsaw Pact and the Issue of Reliability* (Boulder: Westview Press, 1984) 등을 볼 것.

7) Gati, 앞의 책, pp. 209-213을 볼 것.

8) Christopher D. Jones, *Soviet Influence in Eastern Europe: Political Autonomy and the Warsaw Pact* (New York: Praeger, 1981); A. Ross Johnson, et al., *East European Military Establishments: The Warsaw Pact Northern Tier* (New York:

게다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제도적으로 전시(戰時) 기능을 결여하고 있었다. 전쟁 발발시 동구국가들의 군대는 (루마니아 군대는 제외) 군급(army level)에서 소련군에 통합되어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소련 최고사령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sup>9)</sup>

그러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단순히 소련의 지시를 전달하는 메카니즘 이상의 것, 예컨대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적 “동맹정치”가 작용한 모습도 분명하게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다. 즉, 각국의 군사관련 활동은 각국 간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차이, 국내의 정치적 안정도, 동독처럼 동·서독 분단구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특수한 조건, 각국의 전략적 중요성의 차이(소련의 입장에서)와 군사적 갈등(예컨대 지휘권, 무기 근대화, 병력배치 등), 그리고 특히 방위분담 문제와<sup>10)</sup>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흐루시초프 시대에 이루어진 동구 주둔 소련군 지위협정의 체결(1956-57년)과 합동 기동훈련의 정례화(1961), 그리고 이후 1970년 동독과 발트해 등지에서 실시된 대규모 군사 기동훈련(“Comrades-in-Arms”)을 시발로 한 평시 다국적 통합훈련 체계의 정착, 1969, 76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구조개혁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구국가들의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를 공식적 다자간 채널로 이끌어 인정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구국가들의 군사관련 활동은 크게 물적 자원의 추출(extraction) 부문과 행태(performance)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sup>11)</sup> 그런 경우, 추출부문에 있어서 국제정

Crane, Russak & Company, 1980). 그리고 군사관련 기본적 사실에 관해서는, Hugh Farington, *Confrontation: The Strategic Geography of NATO and the Warsaw Pac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참조.

- 9) Johnson, *et al.*, 앞의 책, p. 146. 이 사실은 서방에 망명한 폴란드의 한 대령이 폭로한 군사 비밀협약(“전시 통합군 지휘규정”, 1980년에 체결)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Curt Gasteyger, “The Remaking of Eastern Europe’s Security,” *Survival*, Vol. XXXIII, No. 2 (Marsh/April 1991), pp. 111-112.
- 10) 예컨대, Condoleezza Rice, “Defense Burden-Sharing,” David Holloway and Jane M. O. Sharpe (eds.), *The Warsaw Pact: Alliance in Transi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1984), pp. 59-86은 동구 각국의 방위분담 문제에 관련된 제 측면, 즉 군사지출, 무기생산과 표준화, 군사적 임무의 역할분담, 집단안보의 측면을 분석하고, 동구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조건은 소련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1) 이러한 구분은, Daniel N. Nelson, “The Distribution of Military Effort in the Warsaw Pact,” Study Paper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Pressures for Reform in the East European Economies*, Vol. I (Washington, DC: US GPO, 1989), pp. 187-207에 따른 것임.



치적 긴장의 정도와 거의 부관하게 장기간 안정된 경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방위비의 경우를 보면, 각국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른 지출비의 편차를 계속 유지한 채 장기간 안정되어 있다. 예컨대, 1971-80년 기간동안 각국의 GNP에서 차지하는 군사지출의 비중(%)은, 동독(4.1-4.4), 체코(3.5-3.9), 폴란드(2.6-3.8), 불가리아(2.6-3.0), 헝가리(2.2-2.7), 루마니아(1.6-2.0) 순으로 일정하게 유지됐다.<sup>12)</sup> 1978년 동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소련의 방위비 증액 요구 - NATO의 방위비 3% 증액에 대처키 위한 - 는 최소한의 증액이나 거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NATO가 기존전략("Flexible Response")을 수정해 핵억지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1979년 12월에 신형 미사일(GLCM, Persing II)을 유럽에 배치키로 결정한 이후에도<sup>13)</sup> 동구국가들의 방위비는 이렇다할만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군사적 행태부문에서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전략적 위치의 차이와 맞물려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었다. 예컨대, 합동 기동훈련의 성격, 각국의 훈련 참가 빈도수와 규모, 훈련장소 등에서 그러했다.<sup>14)</sup> 합동 기동훈련은 동구국가 내부의 위기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고, 여기에는 NATO의 "전진방어" 전략과 중부유럽 연합군(AFCENT)에 직접 대면하고 있는 동독과 체코 및 폴란드 3국(소련의 서부 TVD에 속함)의 관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와 대조적인 것으로서, 행태의 측면에서 전략적 위치에 따라 동구국가들 간에 일종의 군사적 역할의 차별화 내지 분업화 현상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외 해외파병, 무기지원(수출) 등 군사활동에 포함되는 여타 부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sup>15)</sup>

한편,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관련하여, 공공재 또는 집단재로서 집단안보의 소비에 있어서 비경쟁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개념에 입각한 이른바 "동맹의 경제이론"(economic theory of alliances)도 주목할만 하다.<sup>16)</sup> 이 이론은 불균형적 국제구조, 즉 강대국과 약소국으로서 소련과 동구 제국 간에 방

1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SIPRI Yearbook 1981*(London: Taylor and Francis, 1981), p. 166.

13) David Holloway, *The Soviet Union and the Arms Race*, 2n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 70.

14) Jones, 앞의 책, 부록 Table 1, pp. 301-309를 볼 것.

15) 이에 대해서는 Nelson, 앞의 논문을 볼 것.

16) Mancur Olson and Richard Zeckhauser, "An Economic Theory of Allianc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 48 (August 1966), pp. 266-279; Keith Hartley, *The Economics of Defence Policy* (London: Brassey's, 1991), pp. 30-31, 52, 54.

위버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내외부의 긴장된 관계를 유효하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집단안보체제의 유지에 따른 각국의 혜택과 비용을 역동적인 맥락(예컨대 “무임승차”의 문제)에서 이해케 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sup>17)</sup>. 그러나 동맹국들의 자발성 가정(假定)이나 동맹의 기능을 군사적 억지(deterrence)에 국한하는 경향 등에서 그것은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동구 동맹국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맹의 정책결정에 완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역시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만을 띤 기구였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조직이 확대·발전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소련·동구관계는 공공재 개념으로는 모두 포착될 수 없는 독특한 이념적, 정치·경제적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 2. 경제적 관계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상호 경제적 의존관계 역시 소련에 집중된 불균형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sup>18)</sup> 각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외무역의 비중이 소련보다 동구에서 현격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무역구조에 있어서도 소련에 대한 동구의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았다(<표4,5,6> 참조). 동구국가들의 무역 상품구조 또한, 비식품 원료와 에너지(“hard goods”)의 수입, 기계·설비류와 산업 소비재(“soft goods”)의 수출이라는 특성을 띠며 소련에 대해 높은 의존관계를 유지하였다.

17) 소련·동구관계에 이 이론을 적용시킨 예로는 다음을 볼 것. Harvey Starr, “A Collective Goods Analysis of the Warsaw Pact after Czechoslovakia,”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 28 (Summer 1974), pp. 521-532; William M. Reisinger, “East European Military Expenditures in the 1970s: Collective Good or Bargaining Off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7, No. 1 (Winter 1983), pp. 143-155.

18) 이러한 측면에서, 소련·동구 경제관계는 “전시경제”(war economy)하의 나찌 독일과 동남부 유럽국들(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 간의 경제관계와 일면 유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일(一) 강대국에 편중된 무역구조와 쌍무간 구상(求償) 거래방식이라든지,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이 말하는 경제적 고립 속의 “배타적 상호성” 등에서 그러했다. 상세한 내용은, Ivan T. Berend and Gyorgy Ranki, *Economic Development in East-Central Europe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p. 265-284를 볼 것.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골적인 대외 경제수탈과 식민지화를 추구한 나찌의 신통상정책(Neuer Plan)과 이에 기초한 국제 경제관계는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은 물론, 그것이 전개된 맥락 등에 있어서 스탈린 사후의 소련·동구관계와 질적으로 판이하게 달랐다. 후술하는 바와같이, 소련과 동구 제국의 경제관계는 소련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았으며, 각국 정권의 내부조건과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절박성을 띠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관계였다.

<표 4>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대외무역의 비중  
(수출·입 평균/GNP), 1978년 (%)

소 련	불가리아	체 코	동 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4.1	27.7	16.8	19.1	30.2	14.0	12.7

자료: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79: A Reference Aid*, pp. 11, 22, 106-107.

<표 5> 소련의 전체 무역에서  
동구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연 도	'60	'70	'75	'80
불가리아	5.6	8.2	7.9	7.5
체코	11.5	10.0	7.7	7.6
동독	17.7	14.9	11.1	9.8
헝가리	5.0	6.7	6.5	6.1
폴란드	7.9	10.6	9.6	8.5
루마니아	4.8	4.2	3.0	3.0

자료: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ССР, 1922-1981* (1982), с.10-27

<표 6> 동구 국가들의 전체 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수출·입 평균)(%)

연 도	'60	'70	'75	'80
불가리아	53.2	53.0	52.7	53.6
체코	34.4	32.5	32.6	35.8
동독	42.8	39.1	35.7	35.5
헝가리	29.5	33.7	36.9	28.5
폴란드	30.3	36.5	28.4	32.2
루마니아	40.1	27.1	18.6	17.6

자료: Vienna Institute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COMECON Foreign Trade Data 1986* (1988), pp. 44, 65, 86, 105, 137, 172

그러나 소련에 대한 동구 제국의 이같은 높은 구조적 의존과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 상호관계는 어느 측면보다도 역동적인 모습을 띠고 전개되었다. 체제운영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무능력, 그리고 불리한 대내외 여건 등에 의해 경제상황이 특히 70년대 후반 계속 악화됨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이해는 날카롭게 상충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합리적 거래방식과 다자간 협력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이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흐루시초프 시대부터 이루어졌다. 유가(油價)의 가격결정체계의 수립(1958년의 이른바 “부하레스트 공식”), 상호경제원조회의(CMEA)의

활성화, 「국제사회주의 분업의 기본원칙」(1962), 국제경제협력은행의 창설(1963) 등이 그 예이다. 70년대에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CMEA의 기구확장, 국제투자은행의 설립(1970), 그리고 1971년의 「CMEA 회원국간 협력의 가일층의 심화와 완성 및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의 발전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60년대의 국제적 분업과 생산의 전문화, 통합적 경제협력망의 구축이 재(再)시도되었다. 소련·동구 경제거래의 주요 측면 중의 하나인 유가의 산정방식도, 직전 5년간의 세계유가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조정(“moving target”)하는 방식(1975년의 이른바 “모스크바 공식”)으로 다소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대체로 미미한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고, 이는 계획경제 메카니즘과 국제통화·금융체제 등 체제 자체와 관련된 문제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sup>19)</sup> 타협이 쉽지 않은 각국의 특수한 경제적 필요, 경제거래상의 상호불신, 선발 개혁국과 후발 개혁국의 개혁 정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이해관계의 대립, 그리고 여기에 결부된 민족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심<sup>20)</sup> 등은 다자간 분업화와 통합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경제협력의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했다. 더욱이 국내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예컨대 경제구조의 부분적 재조정)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기 보다는 대중불만의 일시적 무마를 위한 단기처방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60년대 말부터 국제 데탕트의 기류를 타고 추진된 대서방 경제접촉의 증대는, 7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국내경제의 취약 및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인한 무역조건의 악화와 외채의 누증 등에 의해 서방세계에 대한 동구국가들의 경제의존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은 소련과 동구 각국 간의 상충적 경제관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소 맥락을 달리하지만, 마레스(M. Marresse)와 바누스(J. Vanous)에 의한 소련의 대동구 “보조금” 연구도,<sup>21)</sup> 1970년대 소련·동구관계의 역동적 측면을 이해

19) Imre Vincze, *The International Payments and Monetary System in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ist Countries* (Budapest: Akademiai Kiado, 1984)는 주로 1971년의 「...종합 프로그램」의 금융, 통화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체제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20) Yuri Shiryayev, “New Strategy of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CMEA Countries,” *Social Sciences*, No. 3, 1988, p. 13. CMEA의 정책결정방식은 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전원합의제였다.

21) Michael Marresse and Jan Vanous, *Soviet Subsidization of Trade with Eastern Europe: A Soviet Perspective* (Berkeley: UC,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983); “The Content and Controversy of Soviet Trade Relations with Eastern Europe, 1970-84,” in Josef C. Brada, E. A. Hewett, and Thomas A. Wolf (eds.),

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의 연구는 소련이 차별적 무역조건을 강요함으로써 동구 제국을 착취해왔다는 기존의 지배적 이론을 반박하고, 소련은 오히려 동구국가들이 서방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특혜적 무역조건을 제공했으며 그 댓가로 이른바 무역의 “비인습적 이익”, 즉 군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익을 얻어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록 계산방식에 있어서 상향적으로 과대 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sup>22)</sup>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동구에 대한 소련의 기회비용 형태의 “암묵적 무역보조금”(implicit trade subsidies) — 1960-80년 기간동안 총 870억불 중 1971-80년 기간동안 “지불된” 액수는 755억불에 달한다고 함 — 은 소련이 볼 때 동구 각국이 차지하는 정치·군사적 중요성과 비례해서 (동독-체코-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루마니아 순으로) “합리적”으로 분배되었다고 한다.

소련과 동구의 경제관계를 이렇게 “정치 우선성”의 가정에 입각해, 경제적 보조금 지급과 지정학적 혜택의 수혜 간의 교환으로 파악하는 데는 물론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브라다(Josef C. Brada)는 그 가정을 비판하고, 올슨(M. Olson)과 코헨(Robert O. Keohane)류의 이론에 입각해 소련·동구 경제관계를 무역증진 등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 개념으로 설명하였다.<sup>23)</sup> 그러나 이 설명은 경제관계가 위치하는 복합적 조건 또는 맥락에 대한 단편적 관찰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즉, 그것은 스탈린 사후 소련과 동구가 상호관계의 제반 절차와 과정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불신과 갈등의 폭은 오히려 더욱 커져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말하자면, 그들 관계의 역동적 맥락은 국제레짐의 수립을 필요케 한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의 발전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Economic Adjustment and Reform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8), pp. 185-220.

22) Paul Marer, “The Political Economy of Soviet Relations with Eastern Europe,” in Sarah M. Terry (ed.), *Soviet Policy in Eastern Eur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 174-185; Kazimierz Z. Poznanski, “Opportunity Cost in Soviet Trade with Eastern Europe: Discussion of Methodology and New Evidence,” *Soviet Studies*, Vol. 60, No. 2 (April 1988), pp. 315-332.

23) Josef C. Brada, “Soviet Subsidization of Eastern Europe: The Primacy of Economics over Polit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9 (March 1985), pp. 80-92;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t Foreign Trade Institutions and Policies,” *Ibid.*, Vol. 15, No. 2 (June 1991), pp. 211-238. 국제레짐적 측면은 CMEA의 공식문헌들을 내용분석한 한 연구에서도 주장되고 있다. William M. Reisinger, “The International Regime of Soviet-East European Economic Relations,” *Slavic Review*, Vol. 49, No. 4 (Winter 1990), pp. 554-567.

### III. 역동성의 맥락

#### 1. 이데올로기의 쇠락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 소련·동구관계의 제반 측면에서 보여지는 이와 같은 역동적 성격을,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들 국가내부 및 상호관계 양수준 모두에 있어서 공식적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가 전반적으로 황폐화한 현상과 관련해 이해하고자 한다.

스탈린주의의 강권적 지배구조와 관행에 대한 내부비판은 스탈린 사후, 특히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주의적 “수정주의”(revisionism)의 형태로 대두되었다.<sup>24)</sup> 그러나 소련의 헝가리 침공은 이데올로기의 쇠신을 위한 이러한 내부의 자생적 노력을 좌절시켰으며, 체코 침공과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그러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환상에 가까운 일임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그 결과 이데올로기는 잠재태(*in potentia*)로서 필수적인 자기운동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소련과 동구의 당·국가 운영에 있어서 이데올로기가 차지한 비중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다.<sup>25)</sup> 그러나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그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가 매우 컸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그것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생동감 있는 비전이나 동력원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한갓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언급은 다분히 정치적 의식(儀式)행위에 지나지 않은 경향이 농후했다. 예컨대,

문명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회주의가 승리한 국가에서 만큼 마르크스주의가 그렇게 완전히 쇠락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그렇게 불신임 받아 회화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만약 소비에트 블록에서 사상의 자유가 허용된다면 마르크스주의는 지적 생활에서 가장 매력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sup>26)</sup>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제관계의 공식 이론 또는 이데올로기로서 프롤레타리

24)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Its Origins, Growth and Discussion* (Vol. 3. *The Breakdow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56-474.

25) 이에 관한 논의로는, Allen Lynch, “The Continuing Importance of Ideology in Soviet Foreign Policy,” *The Harriman Institute Forum*, Vol. 3, No. 7 (July 1990); Joseph Schull, “Self-Destruction of Soviet Ideology,” *Ibid.*, Vol. 4, No. 7 (July 1991)를 볼 것.

26) Kolakowski, 앞의 책, pp. 473-74.

아/사회주의적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운명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제주의자는 무조건 주저함이 없이, 절대적으로 소련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다. 왜냐하면 소련은 세계혁명운동의 기지이며, 소련을 방어하지 않고는 그 혁명운동을 방어하거나 전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을 경시하거나 소련에 대항하여 세계혁명운동을 방어하려고 생각하는 자는 혁명을 방해하는 자이며, 반드시 반혁명 운동의 진영에 가담하는 자이다.<sup>27)</sup>

소련의 절대적 권위와 위치를 노골적으로 강변하는 이러한 스탈린 시대의 국제주의 규정은 이후 적어도 공식적 논의나 사전(事典) 상으로는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주의가 세계 노동계급의 상호협력과 연대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관계를 공정하게 규율하는 규정자나 미래 세계 공산사회 건설을 위한 지침으로 기능했다는 현실적 증거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론적” 논의들에서 소련과 소련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최소한 필수불가분의 “모범”(сила примера)으로 강조되었으며, 그럼으로써 국제주의는 소련 주도의 국제체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허구화했다. 나아가 이 점은 1968년의 체코 침공을 계기로 명백하게 공식화하였고,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1981년 12월의 폴란드 계엄령에서 재차 확인되었다.<sup>28)</sup>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형제적 상호원조와 연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제주의적(internationalist) 원칙에 “사회주의의 공동방어 의무”라는 새로운 원칙이 추가됨으로써 사실상 스탈린식 국제주의가 “공식” 부활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제주의의 유기적, 변증법적 통일과정의 대립물로 상정되었던 주권국가들의 일반 민주주의적 제원칙(주권의 존중, 평등,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호혜 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격하될 수 밖에 없었다.<sup>30)</sup>

27)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8 (Москва: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53), с. 300.

28) 처음 공개된 소련공산당 정치국 회의록을 보면, 소련이 노골적인 군사적, 정치적 위협으로 폴란드 지도자들에게 계엄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계엄에 필요한 세부계획도 이미 소련에 의해 작성된 상태였다. Известия, 1993. 1. 21, с. 5.

29) 이에 관한 당시의 대표적인 언명으로는, S. 코발레프의 프라브다 사설과 L. 브레즈네프의 폴란드 통합노동자당(공산당) 5차 당대회 연설문을 볼 것. Boris Meissner, *The Brezhnev Doctrine, East Europe Monographs 2*, Park College, 1970, pp. 50-59.

30) 프롤레타리아/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관한 문헌은 매우 방대하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 출판된 문헌들에 대한 개괄적 해제로는 다음이 있다. Л. М. Шнейерсон, “Проблема пролетар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а в Совет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70-х годов,” в Дитер Фрикке и Л.М.Шнейерсон, (ред.),

...[과거에]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내 국가들의 존재를 부득이하게 망각했다...이로 인해 타성적으로 상호의무와 권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나타났으며, 더 강한 나라가 덜 강한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었다.<sup>31)</sup>

아울러 제민족의 상호접근(сближение)과 융합(слияние) 논리에 입각한 소련·동구 중심의 사회주의 공동체(Socialist Commonwealth) 개념 역시, 대등한 조건하의 문화적 상호침투이기 보다는 소연방 구성의 형식논리를 확대적용하려는 특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는 포용력과 전성(malleability)을 상실한 가운데, 무력을 포함한 소련의 간섭을 미화하는 수사(修辭)로 변질 혹은 복원됨으로써, 동구국가들의 “사회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차단하고 소련·동구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 2. 체제운영의 기본문제<sup>32)</sup>

과거 1970년대에, 소련·동구관계는 19세기와 20세기 초 국제 노동계급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동시에 사회주의 당·국가가 소련 일국의 국경을 넘어 이른바 “세계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한 20세기 후반의 객관적 조건을 반영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부여받았다. 요컨대, 그것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와 연결되는 역사적 발전의 한 단계로서, 세계혁명을 목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적 연대와 조직화 전통을 계승한 것이며, 또한 자본주의 국제관계

Пролетарск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 и его противники.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Минск: Изд. БГУ, 1983), с. 5-33;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 - движения сила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одружества: Реферативный сборник (Мо-сква: МИСОН, 1983), с. 109-140; Л. Я. Дадияни, С. И. Моквин, Э. В. Та-девосян, “О некоторых вопросах историографии пролетар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а,”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КПСС, No. 1, 1987, с. 69-77.

31) А. Богатыров, М. Носов, К. Плеваков, “Кто они, наши союзники ?” Коммунист, No. 1, 1990, с.106.

32) 여기서는 서방국가들이 소련·동구관계에 미친 영향 또는 그것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을 생략했다. 이는 그것이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라(사실 대서방 접촉이 확대된 70년대의 성격상 중요한 외부요인으로서 작용했다), 소련·동구관계 내부에서 기인하는 역동성의 맥락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세계체제론이나 종속이론적 시각에 입각한 중심부-주변부 논의는, 비록 그 논의수준이 추상에 흐르고 상대적으로 내부요인을 경시하는 한계를 안고는 있지만, 소련·동구관계의 세계적 차원의 역동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중국과 유고 등 타(他)사회주의 국가나 타(他)공산당과의 관계도 생략했다.



에 내재한 구조적 불평등과 갈등적 또는 착취적 성격을 타파한 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라고 설명되었다.<sup>33)</sup> 이것은 심지어 80년대 후반에서도 버젓이 반복되었다. 예컨대,

세계 사회주의 공동체 하에서 역사상 최초로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관계가 실현되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이고, 평등하며 형제적인 관계이다.<sup>34)</sup>

그러나 “새로움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자체가 가장 새로운 뿐”<sup>35)</sup>이라는 평가가 그렇게 틀린 말로 들리지 않는 소련·동구 사회주의 국제관계는, 이데올로기의 변증법적 생명력이 사상되고 황폐화한 결과, 사실상 조약한 권력관계를 기초로 하는 국가 내부의 세세력 간, 그리고 국가들(즉, 공산당 정권들) 간의 이기주의적, 갈등적 경쟁관계로 특징지어졌다.

#### 가. 당·국가 수준

우선 국내적인 수준에서, 이데올로기적 열의(enthusiasm)가 사라진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새로운 사회의 발전동력이 되지 못하고, 기존체제의 유지, 국가의 물질적 근대화, 그리고 영토보전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일(一)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동구국가들 전반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그 궤를 같이 했다.<sup>36)</sup> 그런 가운데, 1950년대 이후 소련의 탈(脫)스탈린주의 정책에 따른 외부 압력요인의 완화를 계기로 하여, (각국마다 편차는 있지만) 동구국가들 각각에서 분배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정치가 부활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33) 소련·동구관계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강조는, 그러나, 과거 코민테른과 외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소련, 특히 스탈린의 열시적 태도를 상기해 본다면 역지에 가깝다고 하겠다. E. H. Carr, *The Twilight of Comintern, 1930-1935* (London: Macmillan, 1982), pp. 403-404를 볼 것. 종래의 소련의 사회주의 국제관계론은 80년대 말 페레스트로이카 후기에 국제문제에 대한 계급적 관점의 포기과 더불어 강력하게 비판되었다. 예컨대, Georgi Shakhnazarov, “De-ideologisation of Inter-State Relationships,” *Social Sciences*, No. 1, 1990, pp. 38-55; A. Богатыров 등, 앞의 논문을 볼 것.

34) O. T. Богомолов (ответ. ред.),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содружество и проблемы отношения Восток-Запад в 80-е годы (Москва: Политиздат, 1987), с. 10.

35) Light, *The Soviet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 204.

36) 동구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전반적으로 60년대 후반부터 계속 둔화하기 시작하여 1975-78년 기간동안에 사실상 중단되고 이후 정체와 불황을 면치 못했다. 이에 관해서는, Eva Ehrlich, *Economic Growth in Eastern Central Europe After World War II*, Institute for World Economy,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Working Papers, No. 7 (June 1992)를 볼 것.

문제와 결부돼 증폭됨으로써 기존의 일당 지배체제는 갈수록 상당한 도전에 처하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다.

그러나 동구국가들의 일당체제는 정권 수립의 기원상, 체제의 성격상 대내외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국내적 요구들을 만족스럽게 흡수하고 해결할만한 탄력성을 결여하고 있었고, 실령 체제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헝가리의 나지나 체코의 두브체크 정권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소련에 의해 저지되고 “정상화”되고 말았다. 결국, 각국별로 (특히 민족주의적 통치방식이 강했던 루마니아의 경우) 차이가 있긴 했지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해, 권력 엘리트는 경제적 부의 증대, 대중소비부문의 확대, 소득분배의 평등화, 노동규율의 완화 등 단기적 처방으로 타협함으로써 인기 없는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의 결과로서, 당에 의한 권력자원의 독점구조를 전제로 한 대중의 체제순응과 물질적 복지의 교환 (이른바 “political-economic tradeoff”)이라는 일종의 암묵적 사회협약(social compact) 또는 사회적 타협이 소련과 동구 각국에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sup>37)</sup>

결국 체제에 대한 순응의 근거가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로 귀착된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 권력의 정당성 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일당지배체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즉,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에 의한 잉여의 축적수준이 낮아지고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내부의 균열이 표면화하면서 당은 갈등의 중심지이자 대상(target)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달리 표현하면, 체제순응의 댓가로 지불할 경제적 혜택의 감소와 더불어 발생한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압력은 여과되지 않은 채 곧바로 정치화함으로써 당 중심 체제 자체의 정당성 문제에 직결되었다. 또 한편으로 그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구 정권의 소련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종속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소련이 감당해야 할 부담까지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나. 지역 수준

국제주의 이데올로기의 황폐화와 더불어 소련·동구관계 또한 국가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당근과 채찍”이 적용되는 고래(古來)의 전통적 국제관계의 범위를 벗어 나지 못했고, 나아가 독특한 또는 “왜곡된” 맥락에서 점점더 불화·갈등하는 경향

37) Stephen White, “Economic Performance and Communist Legitimacy,” *World Politics*, Vol. XXXVIII, No. 3 (April 1986), pp. 462-482; Valerie Bunce, “The Empire Strikes Back: The Evolution of the Eastern Bloc from a Soviet Asset to a Soviet Li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1 (Winter 1985), pp. 31-32 참조.

을 나타냈다.

사회주의가 일국의 국경을 넘어 확대되자 사회주의 나라들 간의 국제관계를 규율할 이론적, 실천적 기초를 정립하는 문제가 시급했다.

(중략)

[그러나] 불필요한 환상들이 존재했고 때때로 큰 오류들이 저질러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예컨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발전 및 상호관계의 비모순적, 비갈등적 성격에 대한 1950년대와 60년대의 유치한 개념들은 커다란 해악을 초래했다. 그 “비갈등” 이론은, 사회주의 공동체 내의 제반 모순과 위기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의 적절한 탐색, 방지, 제거를 위한 메커니즘과 절차의 강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부정확한 결정들이 내려지기 일쑤였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관계는 왜곡되었다.<sup>38)</sup>

1950년대 후반부터 동구 각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과거 스탈린주의의 “과잉 왜곡”을 제거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관계를 다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제도화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그리하여 70년대에 오면 “통합”(integration)이란 개념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기술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광범하게 사용되기에도 이르기도 했다.<sup>39)</sup> 그러나 제분야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그 합의의 폭이 어느정도 확대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소련과 동구국가들은 자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다 더 고수하고, 타국과 자국의 이익 간의 차이를 더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소련·동구관계의 제반 변화는 기본적으로 각국에서 암묵적 사회협약이 이루어진 맥락과 유사한 또는 이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그 기본특성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각국 정권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고 소련의 정치·군사적, 물리적 지배구조를 전제로 한 상호간의 교환관계적 성격을 띠고 있었

38) Charles Gati, *The Bloc That Failed: Soviet-East European Relations in Transi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에 부록으로 수록된 Institute of Economics of the World Socialist System의 논문, “The Place and Role of Eastern Europe in the Relaxation of Tensions between the USA and the USSR”(July, 1988), p. 208.

39) 그러나 이 통합 개념은, 특히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서방의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정의되고 사용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련측의 정의에 따르면, 통합은 소련의 모델에 유사한 공통의 경제모델과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구조의 채택, 더 많은 경제 부문에 걸친 공동계획의 발전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 개념에 따르면, 통합을 위한 동구국가들의 경제 또는 일반적 정치·경제구조의 발전과 확대는 결국 소련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대칭적 의존관계의 심화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P. Alampiev, O. Bogomolov, Y. Shiryaev, *A New Approach to Economic Integration*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4)를 볼 것.

다. 즉, 앞서서도 본 것처럼, 대체로 소련·동구관계는 정치·군사적 순용과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암묵적 국제협약 또는 국제거래는 궁극적으로 소련과 동구국가들 모두에게 이익보다는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구 정권의 대내외적 취약성은 극복되지 못했으며, 소련 역시, 동구의 권력자원에 대한 독점과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동구 각국의 내부적 요구와 불만들까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대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는 기존 경제체제의 구조에 기초한 동구 공산당 정권의 권력기반을 계속 잠식함으로써 정권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켜 나갔다. 아울러 그것은 동구국가들의 내부안정과 자활력(viability)을 도모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의 정치·군사적 순용을 유도하려는 소련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 대(對)동구 경제지원을 확대하게 만들었으며, 그에 따라 소련에 대한 동구의 의존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특히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와 같은 동구의 경제적 위기시 소련이 동구의 경제안정을 위한 일종의 균형자(balancer) 역할을 한 데서 두드러졌다. 예컨대 1980년을 전후한 폴란드의 경우, 소련의 차관과 원료·에너지 지원으로 폴란드의 경제적 위기는 일시적으로 진정될 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댓가로 폴란드는 외채상환을 위해 무역방향을 소련에 더 집중해야만 했다. 또한 소련의 지원에 의한 원료·에너지 집약산업의 투자 증가로 말미암아 소련의 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더 확대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형태의 종속심화("radical dependency")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sup>40)</sup> 동구국가들의 소련에 대한 이같은 가일층의 의존은, 소련으로서도 결코 달갑지만은 않은 현상을 초래했다. 즉, 생산조건의 열악화와 성장둔화와 같은 자국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동구정권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능력 이상의 "과잉개입"(over-commitment)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나아가 여기에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이나 민족주의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의구심을 더 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구국가들의 신뢰성(reliability) 문제가 밀접하게 결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동구가 소련에 자산(assets)이 아니라 부담(liability)이 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결국 불균형적, 독점적 국제구

40) Jadwiga Staniszkis, "The Dynamics of Dependency," Wilson Center East European Program, Occasional Paper, No. 10, 1987, pp. 9-10, 18-19.

41) 이용한 통계자료와 계산방식에 있어서 신빙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있지만, 70년대의 점증하는 소련의 제국(帝國) 유지비용을 구체적으로 미국의 그것에 비교해 수치

조, 그리고 이 속에서 각국 정권의 권력 이기주의에 바탕을 두고 각박하게 전개된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이러한 상호관계는 양자 모두에게 불만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소련·동구관계는 대내외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체제의 자구(自救)를 위한 “위로부터의” 활로개혁이<sup>42)</sup>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상호 합리적이고 이익적인 측면이 점점 더 줄어들고 대신 상호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측면이 강해지는 독특한 형태의 갈등적 경쟁관계로 발전해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

### 맺음말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는 유럽의 문화적 특성을 “최소의 공간, 최대의 다양성”으로 집약하고, “유럽적 유럽의 소전형”이 되기를 갈망하는 중부 또는 동부 유럽이 20세기 후반에 처한 비극은 러시아에 의해 지배된 것, 즉 “최대의 공간, 최소의 다양성” 원칙에 기초한 “이질적 문명”에 의해 점령된 사실에 있으며, 더욱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동경해마지 않는 서구 자체가 대중 소비문화에 함몰됨으로써 문화적 고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갈파한 바 있다.<sup>43)</sup>

밀란 쿤데라가 염두에 두었던 유럽의 다문화성(多文化性)은 국제관계 또는 국가체계(state system)의 성격을 또한 좌우했다. 그리하여 근대 이래 유럽의 국가체계는 민족국가들의 수적팽창과 대내외 주권의 질적강화라는 장기적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상호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특성을 나타내 왔다.<sup>44)</sup> 유럽 역사의 이면(裏面)에 위치지워졌던 까닭에 동구 제국은 서구의 대(大)민족국가들에 비해 국가적 전통이 취약하고 단속적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 역시, 최소한 유럽

---

를 동원해 “계산”한 논문도 있다. Charles Wolf, Jr.,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Soviet Empire,” Henry S. Rowen and Charles Wolf, Jr. (eds.), *The Future of the Soviet Empire* (London: Macmillan, 1988), pp. 121-140.

42) 1960년대 말 이후에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권에 부분적인 편입을 시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43) Milan Kundera, “The Tragedy of Central Europe,”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April 26, 1984, pp. 33-38.

44) L. G. Sharpe, “Fragmentation and Territoriality in the European State System,”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 No. 3, 1989, pp. 223-238. 국제적 경쟁체계의 역동성에 기인하는 팽창주의는 유럽국가들 상호 간의 부단한 군사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해외 식민지의 추구로 표출되기도 했다. Theda Scocpol, *States &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 Chin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21.

인입을 염원하고 자부하는 민족적 정체화(identification)의 차원에서, 그러한 유럽 국가체계의 특성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그 염원이 현실화한 1918-38년 양차대전 사이 기간의 경험은, 비록 전후 승전국들에 의한 국제질서의 재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동구국가들로서는 결코 반납하고 싶지 않은 역사의 한 성취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20세기 후반에 수립·전개되었던 소련·동구 사회주의 국제관계는, 그 전통을 대체할 생존력 있는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는 데 결국 실패하고 자세적으로 붕괴하고 말았다.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이 갖는 잠재적 창반성을 “변증법적으로” 개발·통일할 수도 있었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는 자기운동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변질되어 그것의 질곡으로 작용했다. 또한 자본주의 국제체계의 모순을 극복한 대안(代案)이라고 한 때 선전되고 믿어졌던 사회주의 국제체제는 희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배타적 실리주의로 특징지워지는 형해화(形骸化)한 권력관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소련·동구관계의 역동성은 바로 그러한 맥락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추동력이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현상악화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상호공멸적인 특성을 강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빌란 쿤데라가 지적하고자 했던 중·동부 유럽의 “본질적 비극”은 소련이 아니라 유럽 자체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소련이 붕괴되고 난 현시점에서 그의 말을 되새겨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중부유럽은 폭압적인 거대한 이웃에 대항해 싸워야 할[했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시대를 뒤로 하려는 이 시대의 미묘하고 잔인한 압력에도 대항해서 싸워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유럽의 반란들에는 보수적이고 거의 시대착오적이라고 부를만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이다. 그 반란들은 과거, 즉 문화의 과거, 근대(近代)시대의 과거를 회복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직 그 속에서, 문화적 깊이를 간직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만이 중부유럽은 자신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중부유럽의 진정한 비극은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다. 시대는 변했고 유럽 자체 내에서 유럽은 더 이상 고상한 가치로서 경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한다.<sup>45)</sup>

45) Kundera, 앞의 글, pp. 37-38.

## Dynamics of the Soviet-East European Relations in the 1970s

Ik-Hee Kim

In spite of the highly asymmetric power structure favorable to the Soviet Union, the relations between her and the East-European "brother" states were unfolded very dynamically on the basis of their respective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conditions. However, the devastation of Marxism-Leninism as the official ideology and the increasing economic stagnation derived from various systemic and unsystematic problems determined the general nature of the socialist states on the regional level as well as on the "party-state" level in the 1970s. As the "Soviet bloc" states tried to compromise the pressures "from below" by establishing a "social compact," i.e. by providing the mass with short-term economic benefits, the Soviet Union,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of sharp competition among egocentric states, exhibited a strong tendency to buy the East European states' politico-military compliance with economic compensation.

The result, however, was unsatisfactory. Under the circumstances of deteriorating economy, the legitimacy of the East-European one party systems was eroded and, in addition to it, the degree of their dependence upon the Soviet Union was still more increased. Also, the Soviet Union had to bear the burden in her own way. That is, due to her monopolistic and monopsonistic position in the region, the Soviet Union had to commit to fix up the adverse situation in the region by providing the unpopular regimes with greater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s beyond her own actual capabilities. In the end, such management and the system itself of the Soviet-East European soci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proved, for both of them, to be mutually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ones.